

광주 민간공원 사업 토지 보상 '시끌'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금액 갈등 시청 항의 방문 시장과 몸싸움도 도시계획위 심의 등 절차도 지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대 난관인 토지 보상을 놓고 광주시와 소유주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토지 소유주와 이용섭 시장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 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시는 당초 올해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금액 등

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인 곳은 6개 지구(마북·봉산·중앙2·일곡·운암산·신용)다.

3개 지구(송암·수랑·중앙1)는 감정평가가 추진 중이고, 1개 지구(중외)는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소유주들이 시, 자치구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 소유주들은 시청, 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으며, 시장, 구청장, 공무원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0일엔 광주시청 내 시장실에서 이뤄진 이용섭 시장과 토지 소유주 10여명과 면담 자리에서 이 시장과 소유주들 몸싸움이 발생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소유주들이 보상 금액 인상과 비공인 시설 면적 확대를 요구하며 행정 소송·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자와의 협의와 행정 절차도 순조롭지 않다. 중앙1지구는 광주시가 갑자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기로 하면서 지가상승 등에 따라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선달 달진격으로 최근 특정 인사 편중 논란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 절차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용도 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심의가 완료된 대상지는 중외·신용·수랑 등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7곳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인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2023년까지 공원 786만8000㎡의 90.3%(710만4000㎡)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000㎡)에는 아파트 1만2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조9152억원이며 이 가운데 토지 보상은 1조807억원으로 추정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동구 평생학습관 개관 11일 광주 동구 평생학습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은 커뮤니티실, 음악교육실, 그룹룸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섭 시장 “광주공공배달앱 도입...일반음식점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특별주간 현장 방문 3무 특례보증 지원 연장 등 건의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업계를 돕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는 등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용섭 시장은 11일 오전 상무지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에서 김상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5개 자치구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음식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주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코

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유지비용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 업계는 이날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 지원'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손실보상 지원 ▲외국인 거주자 코로나19 검사 시행 ▲야간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단속 유예 ▲공공배달앱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 ▲일회용품 처리를 위한 관급봉투 지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공공기관 점심시간대 구내식당 필수인원 제외한 이용제한 ▲광주 대표 음식축제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상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상반기 내에 상당수 음식점이 폐업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일반음식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4월부터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시범 운영되면 관내 음식점에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목소리를 담은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13차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대상 9월까지 자진납부·소멸기회 부여

광주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징제,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은 178명에 체납액 98억원, 법인은 222곳에 195억원으로 총 293억원에 이른다.

사전안내문 발송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멸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단공개에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멸기간인 9월까지 ▲지방세 불복 청구중 이거나 ▲체납액(가산

금을 포함)의 50%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하고 11월17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정인식 광주시 세정과장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물론 신용정보회사의 공공정보등록, 가택색,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해 조세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업과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늘리기 총력

전남도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줘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다자녀행복카드'의 가맹점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전남도가 지난 2008년 농협과 협약을 맺고 도내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가맹점은 전남에서 운영 중인 학원과 음식점, 이미용업, 육아용품업, 유통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모집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0.2%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 전남도와 사군 누리집에 업체 현황 게시, 인증 스티커 부착 등으로 업체 홍보 효과도 있다. 다자녀행복카드 사용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학원 10%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농협 주유소

5% 할인 ▲CGV·롯데시네마 1500원 할인 ▲교보문고·YES24 등 서적 3% 할인 ▲전남도내 가맹점 5~20% 할인 등이다.

3월 초 기준으로 도내 카드 이용자는 5306명이다. 지역 가맹점은 음식점 176개, 안경점 88개, 미용실 32개, 학원 31개 등 총 426개 업체가 등록됐다.

전남도는 2022년까지 연간 신규 발급 인원을 해마다 4000명씩 늘리고, 지역 가맹점도 총 40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실장은 “인생에서 누리는 큰 기쁨 중 하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며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청년이 아이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따뜻한 가족애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대불산단 조선업 맞춤형 환경컨설팅

배출시설 설치신고 25개 사업장

전남도는 코로나19 등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불산단 중소 영세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맞춤형 환경 컨설팅에 나선다. 중소 조선기업이 집중된 대불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선박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도장시설 등 대기질 적정 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영암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투자-이행과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산단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11~12월 한시적으로 추진했으나, 올해는 연중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와 영암군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25개 사업장이다. 지원 분야는 대

기-폐수-비산배출-취발성 유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등이다.

지원 내용은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공정 진단, 최적 대안 권고 등 기술적 지원과 환경정책 동향, 법령 개정 및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컨설팅을 바라는 업체는 도 환경관리과 환경민원팀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동부지역본부 누리집(https://dongbu.jeonnam.go.kr) 소통·공감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기업별 지원반에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 30일 이내 컨설팅(현장 또는 서면)을 해 사업장에 결과를 통보한다.

올 하반기에는 소통간담회를 열어 행정기관과 산업계, 동종 업계 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컨설팅은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기업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대불산단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2020년 신간!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제5쇄 판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인기리 판매중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최신간 양장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